

한국의 공무원노조가 불가피하게 업무의 영역에서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점상조직을 총연맹 차원에서 함께 껴안고 간다면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2 한국 노점상의 현실과 정부의 노점상정책

최인기 전노련 사무처장

1. 빈곤 8백만 시대

노점상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좀더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우리사회를 소위 신 빈곤 8백만 상태라 하기도 하고, 천만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사회 빈곤층은 최저생계비 기준선 이하 최저 366만 명에서 최고 중소득 및 차상위계층 743만 명에 이르며, 저소득지역 가구의 60%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의 60%가 1년이 내에 재 빈곤을 경험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 빈곤의 일차적인 원인은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 50% 이상이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려져 있듯이 임금 격차로써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52.6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비정규직은 각종 사회보장과 시간외수당 등 각종 부가급여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보통 가정의 부부가 맞벌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라

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다. 향후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반영하듯 소득 2만달러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고 하여도 당분간 국민 80%가 "빈부격차 심화"되었다고 밝혔듯이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다.

2. 한국 노점상의 현실

노점상 문제를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와 개별적으로 떨어 트려놓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몇가지 더 언급을 하도록 하자 우선 노점상은 과거 농촌 경제의 붕괴에 따른 발생에서 도시 안에서 재생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90년대 이후 정리해고를 통한 실업자형 노점상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노점상연합'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직업·지위별로 임금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 등에 종사를 하던 이들의 비중이 37.7%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노동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얽힌 데 덮친 격으로 해외 유통시장 전면진출과 재래시장의 소멸 등으로 소득수준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노점상인들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편견에 불과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전체 노점상의 절대다수는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조건 아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적으로 2001년의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는 포장마차의 경우 절반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조사대상 80%로는 평균 약 3-4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들어 수입에 있어서 변동을 감안한다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의 경우 2인 이상 부부나 가족이 대부분 새벽까지 함께 장사를 한다. 그리고 단속과 벌과금으로 뺏기는 비용과 기후 적인 조건으로 장사를 못하는 일수를 뺀다면 이에 미치지 못한다. 정말 대다수의 노점상은 사회적인 편견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위와 같은 조건 못지 않게 노점상들은 직접적인 단속과 법제도로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의 적용이 높아지고 있다. 2001년에는 총 1000건 이상에 (10억 6195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2003년 들어 서울시의 노상적치물 과태료, 변상금 부과건수는 63% 이상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종로구청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단속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노점상들에 대하여 일부 기업형 노점상을 확대 적용하고 마치 다수가 높은 수입을 얻는 것과 같이 이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령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 수가 배로 늘었다는 사실은 법으로만 규제할 수 없는 노점상 발생의 사회적 이유가 있는 것이며 노점상의 갈등문제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밖에 거리의 노점행위가 도로라는 공공공간을 무단 점유해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더라도, 노점행위 자체를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정부의 노점상정책

정부의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없다. 있다면 무질서의 주범, 탈법과 치안불안의 온상이며 각종 법규위반은 물론 불순세력과 연계하여 반정부 불법시위를 일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생치안과 공권력 확립,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점단속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용역 업체는 약 2천 여 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중앙정부는 별다른 정책기준과 원칙 없이 노점상 문제를 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시작했고,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를 가진 자치단체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라는 이유를 들어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 위탁' 하는 소위 '용역 단속반'을 채용함으로써 노점상 단속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민간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당국과 노점상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마찰은 현저히 줄어들고, 당국은 노점단속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을 피해 갈 수 있었으나 자치단체별로 개별화된 노점상 단속의 양태는 오히려 더욱더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폭력조직들에 의해 운영되는 용역철거반은 과거 공무원에 의해 단속을 실시할 때 보다 단속시 인명 살상의 위협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 성과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단속의 강도는 더욱 큰 것이다.

용역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각 용역회사 별로 정식 직원은 10명 미만이며, 대부분 임시직으로 고용을 하거나 심지어는 역전의 노숙자와 미성년자까지 동원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점 조직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잠적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현장을 총지휘하는 현장 책임자가 맡는데, 이들은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떠맡는다. 이밖에 인력을 전문적으로 동원시켜주는 중간 브러커가 있으며, 이들은 인력시장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전문 폭력배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그들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수 천 개의 용역회사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유흥가가 장사가 되지 않자 폭력배들의 일상적인 업무의 공간이며, 은신처로 변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챙기는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기업체가 된 것이다. 현재 각 구청에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철거 용역반을 상주시키거나 새롭게 입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노점 단속 시 철거 용역반을 투입시켜 무자비한 폭력단속으로, 우리사회의 저소득 도시빈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며 끊임없이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각 구청마다 국민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는 용역입찰비용을 도시빈민들의 복지정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물리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단속과 더불어 그 동안 도로교통법, 식품 위생법 등 경범죄 처벌 차원에서 부과하던 과태료나 벌과금을 도로법 등 상위법을 적용함으로써 수백 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생계를 압박하고 결국은 노점행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점상에게 적용되는 법규도 도로법, 도

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외에 소비자보호법, 음반법, 시장법, 고물영업법, 주차법은 물론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노점상을 범죄시하며 형사범화 하였지만 노점상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제안하는 공공근로 사업 및 전업유도와 대출지원 사업 등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늘어나는 노점상에 임시방편으로 처방하기 때문이다.

4. 노점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하여

그동안 단속과 갈등으로 일관된 노점상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 동안 견지해 온 '건설행정이나 도로관리,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초를 뛰어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사고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실로 존재하는 노점상의 실체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불법이기에 단속 외에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는 한 노점문제의 해결은 없다. 이제는 노점상도 변해야 한다. 노점상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간의 활용과 도시계획, 도로행정 등 당면한 과제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근본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더 이상... 노점상이 생겨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점상이 노점을 하지 않고도 먹고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좀더 실질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정책 확충, 그리고 불안정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등을 통하여 노점상을 공식부문이나 생산현장으로 복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영세노점상에 대한 허용과 묵인을 통해 도로라는 공간의 보행권을 뛰어넘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

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별 조례화, 시행령, 의회의 결의 등을 통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남아 돌아가는 공간을 이용한 풍물시장 등의 합법공간 확보 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점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기 구인 '노점상 대책위'를 구성하여 노점상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역기능을 극복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화로 이것부터 시작하면 노점상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이 된다고 본다.

토론편 3 뜨거운 감자, 노점상

심재욱 서울시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 한국의 노점상

노점상은 가장 오래된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노점상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없다. 심지어 노점상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도 불법이민자나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불법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노점상 문제가 한 나라의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의 노점상은 외국인들에게 부끄러운 대상일 뿐이다. 70, 80년대 농촌경제의 붕괴로 이농한 가난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던 노점상은 2004년 현재, 허울 좋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광풍속에서 도시내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경제난속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이 대책'이다. 1989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노점상관리조례(안)'을 추진한바 있지만 노점상 양성화에 대한 관리부담과 '권리화' 되는 데

다른 부작용 우려로 추진과정에서 백지화되었다. 그 후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뚜렷한 변화 없이 소관업무만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다.

지난 해, 이명박 시장의 야심작인 '청계천 복원 공사' 과정에서 보였던 서울시의 모습은 과연 행정당국이 노점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2. 노점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

1) 행정부

노점상을 바라보는 행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점상을 단지 도로관리행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채, <노점 증가 단속 저항 재적응>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다음 두 기사는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행정편의적이고 탁삭공론식인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특히 간판 정비와 함께 보도에 설치돼 있는 분전함, 지하철환기구, 공중전화 부스 등도 정비해 보행 환경을 확 바꾸면 이들 시설을 망패물 삼아 자리 잡은 노점상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李시장은 내다봤다.”

(2004년 02월 24일 중앙일보 - 종로 정비는 제 2의 청계천 사업)

“서울시는 무대책이 대책 = 서울시는 이 같은 노점상들의 반발움직임에 대해 “불법을 용인하면 또 다른 불법이 양성될 뿐”이라며 대책마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최동윤 청계천추진본부 총괄담당관은 “노점상들이 대부분 골목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현재 청계천복원 계획 중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집단행동이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또 “청계천복원공사는 노점상과의 대립을 가져오는 사업

이 아니며 노점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2003년 02월 17일 매일경제)

2) 점포상인

상인들은 노점상을 대하는데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권형성을 위해 노점상과 협조하기도 하지만, 노점상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형평성(세금)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으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증가한다.

3) 시민

시민들 또한 노점상을 대하는 태도는 이중적이다. 노점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만, 보행권 침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행정부의 ‘노점은 불법이니, 먹지도 사지도 맙시다’ 라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노점을 이용하는 건 노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접근성)과 노점상을 가로관리 차원이 아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단,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4)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기본적으로 노점상을 저소득층의 주요 생계수단으로 인정하며 사회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노점상에 대한 이러한 시각들의 근거에 깔려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책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노점상이 지구적 생계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다(이는 행정의 측면에서도 적용된다). 즉, 단순히 노점상을 가로관리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점상 정책은 단순한 가

로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3.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고언

노점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노점상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신규노점상을 억제하고 기존노점상들을 공식부문이나 생산현장으로 복귀시키며 완전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남은 노점상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노점상 합법화를 위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노점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아전인수격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노점상,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등이 참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노점상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공식화하는 것이자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의 실체를 인정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서울시에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단속 등으로 인한 사안별 대화가 아닌 노점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폭넓게 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을 강제해야 한다. 당장은 노점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서울시와의 대화가 쉽지 않겠지만 끊임없는 대화요구를 통해 정당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점상합법화'를 대비한 전노련 내부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노련 내

부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한다. 가령, 노점상내의 빈부격차문제나 신규노점상에 대한 관점 등은 어떠한지 논의해 보아야 한다. 양대 조직의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이제 합법화에 대비한 다양한 내부논의들이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정책활동을 제안한다. 전노련내에서 노점상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혹은 노점상 합법화와 관련된 일상적인 정책 활동의 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 만일, 그러한 정책 활동의 틀이 없다면 공동으로 '노점상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노점상 합법화'를 위한 정책적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토론문 4 토론내용 요약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 사회자

칼 맑스가 얘기했듯이 세계를 분석하면서 핵심은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공동 핵심의제일 것이다.

□ 팻호른

어떻게 여성지도자를 양성시킬 것인가?

국제노점상연합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제노점상연합은 여성들이 각 국의 모든 조직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대의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함으로써 우리 조직으로 하여금 여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

은 제도가 있다. 이러한 영향이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발언한 것처럼 노동자 계급의 연대, 비공식부문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본다. 국제노점상 연합은 전세계 노총들과의 많은 연대를 해 왔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으면 한다.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비공식부분, 공식부분 노동자들이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노총들과 이런 연대를 해야 한다.

같이 공동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국제공공노련 같은 경우 작년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여성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진행된 바 있다.

노점상단체들과도 공동 세미나를 통해 문제를 공유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와 노점상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공리를 하고 서로 이해를 했으면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노점상단속을 하라고. 그래서 공무원 노조는 노점상들의 입장에서 본적이 없다.'고 한다. 워크숍 이후에는 다시 그런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같이 정부에 대해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었다.

심재옥씨가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없다고 하는데, 대화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거고, 어떠한 형태의 협상공간이 필요한가는 고민을 해야 한다. 강력한 조직으로 하여금 집회라든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얻은 합의로 그들을 어느 정도 묶어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점은 노총과도 연동된 문제일 것이다.

노점상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프로그

램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회나 시정부에서 먼저 발의할 것이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발의를 할 것이다.

언급한 게 우리 프로그램과 연장선상에 닿아있는 측면이 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정보를 충분히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가 문제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하여 실제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노련의 이러한 발전, 전진은 국제노점상 연합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그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인도

신뢰라는 것이 그냥 노점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니까 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이다. 가맹조직으로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공식부문이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렴하게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빈민으로 하여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빈민의 부분이 다른 빈민으로부터 상호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세금을 안내고 장사하고 있다는 듯이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 간접세를 통해 정부의 예산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세금을 냄으로서 사실상 정부의 예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에도 노점상과 경찰과의 관계, 노점상과 시와의 관계에서 그들은 불법이란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다.

뭄바이에서는 실태조사 한 이후에 노점상들이 4천만 달러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불법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점도 있는 것 같다.

노점상 입장에서의 핵심은 단결 조직화하는 문제일 것인데, 조합도 있고, 연합체도 있다.

뭄바이 같은 경우 천이백만 명의 인구 중 노점상들이 25만 명이고, 30%가 공식부문이라고 감안한다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숫자이다.

일자리들이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공식부문에서 없어지고 있다.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노점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영구적인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노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전에 1/5또는 1/4정도가 수입을 벌고 있는 거다.

노점상의 수입은 별로 안 된다. 인도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노점의 형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나아보이나 수입이 별로 없다.

정책개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핏호른이 얘기했다싶이 한쪽에서는 협상의 면에서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비공식 부문이 더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탄압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시정부뿐만이 아니라 노동시간도 문제다. 실제로 공해오염 속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매일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종합을 해보면 노점은 굉장히 힘든 문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전국적인 노점상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모두다 참여를 했고, 개입을 했고, 정부는 이것을 수용했다.

가맹조직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같이 단결해서 싸우는 것이 핵심일 것이며 이것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라 본다.

나아가 노점상조직이 점점 더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평가및향후계획



“민국의 노점상이여 단결하라”

2004 국제노점상연합 서울대회 평가(안)

장소 : 여성개발원 일시 : 2004 3월 16일 - 19일

1. 국제대회 목적

- 세계 노점상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 국제노점상연합의 첫 국제대회를 성사시킨다.
- 불법으로 매도되고 단결권/단체행동권/기본적 생존권 자체를 탄압 받고 있는 한국 백만 노점상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노점상 대단결과 노점상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
- 한국 사회/사회운동에서 노점상운동, 빈민운동,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을 공유한다.

2. 총평 :

이번 대회는 10개국 15개 단체(한국 과 국제노점상 실무자 포함) 총 31명이 참석을 하였다. 3박 4일동안 진행된 대회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탄압 받는 것에 맞서 국제연대를 통해 단결하고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된 사실상의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몇가지 미숙한 부분을 빼고는 완벽하게 성사시킨 성공적인 대회였다 할 것이다. 대회를 통하여 향후 3년간 국제 노점상 운동을

이끌 공식 지도부로 한국의 전국노점상연합 김홍현 의장이 선출되었고 규약 개정안과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최근 멕시코 칸쿤투쟁, 세계사회포럼 등을 계기로 국제연대투쟁이 부각되고 절실해진 상황에서 국제연대사업의 이해와 국제대회의 경험을 각 단체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각 단체들과의 조직위 구성과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점상운동, 빈민운동,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에 대한 이해지반을 넓혀나가는 과제가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와 빈민운동 및 노점상운동의 지평을 넓혔다.

3. 각 국기별 참석 현황

베넌, 가나, 기니, 인도, 케냐, 한국, 모잠비크, 페루, 남아공, 잠비아 등 15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3년 임기의 집행위원(International Council)들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 1) 의장 : 김홍현(한국), 부의장 : 마날리 샤(인도), 재정책임자 : 폰달레 잘릴레(남아공), 사무총장 : 엘비스 치살라(잠비아)
- 2) 임원의 집행위원 : 테레사 아콩고(케냐), 파투마타 바(기니), 클라리스 나위(베넌) 글로리아 솔로사노(페루), 라멕 카시와(잠비아), 제이콥 오톨(가나), 아빈드 싱(인도), 마누엘 술카(페루)

4. 총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결의문을 통과시켰다.

- 1) 비공식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할 권리와 복지를 요구하면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자기 지역과 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운동 및 다른 행위자들과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로 결의했다.
- 2) 외국인과 이주 노점상들: 외국인 비공식 상인들이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뇌물을 요구받고 쫓겨나기 쉬운 처지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각국의 노점상인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고, 그러한 무역이 노점상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절한 조건들을 개발할 것으로 결의했다. 또, 2004년 6월에 국제노동대회(ILO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참가하여, 외국인 노점상들이 당면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인정받기로 결의했다.

3) 아동노동 : 우리는 ILO의 최소연령협약 제138호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 제 182호를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아동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지지하며, 소녀들의 동등한 권리를 증진할 것이며, 아동들이 어린 가족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해야 할 필요성을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인 노점상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노점상들의 근무지에서 가까운 곳에 저렴한 탁아시설들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의한다.

4) 정부의 탄압과 단속에 대한 투쟁 : 우리 회원들 중 다수가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단속을 당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들이 생계를 꾸릴 능력과 생산성이 저해 받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노점상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탄압에 대하여 부단히 싸울 것이다. 여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빈곤한 노점상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을 비롯해서 노점상들이 겪는 문제들을 널리 알려내기로 결의했다. 정부 당국이 노점상들, 선출된 노점상 대표자들과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결의했다.

5. 진행경과 및 실무평가

1) 일정별 평가

- 기간 조직위구성 및 사업검토.
- 3월 8일(월) : 국제노점상연합 실무자 2인 도착 실무 및 프로그램 점검 및 의견공유
- 3월 9일(화) : 대회실무검토 및 의견조율
- 3월 10일(수) : 전노련 긴급운영위 개최 사업공유, 음반 및 테이프 제작배포, 2차 간담회개최 통역자 회의
- 3월 11일(목) : 전노련 정기중앙위를 통하여 국제대회 결의, 음반제작,
- 3월 12일(금) : 일정 점검
- 3월 13일(토) : 일정 점검 서울시 방문 기타 정책토론자 섭외.
- 3월 14일(일) : 실무자 현장 준비, 참가자 입국 시작, 코디네이터 및 참여자 서울운동장 전학 행사장 선전물 및 현수막 부착.
- 3월 15일(월) : 참가자 대거 입국, 실무자 배치, 국제노점상연합 지도부 점검회의
- 3월 16일(화) : 개막식 개최, 국제노점상연합 회의(보고안전)
- 3월 17일(수) : 국제노점상연합 회의 규약 및 특별결의문 채택, 지도부 선출
- 3월 18일(목) : 토론회 개최, 단체별 간담회, 서울시 관광
- 3월 19일(금) : 국제노점상연합 페스티벌, 출국

2) 한국조직위평가

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국제노점상대회 한국조직위를 구성하여 대회를 준비하였다. 성과로는 국제연대 담당자간의 교류를 통하여 대회 중 처리해야 할 프로그램 및 통역등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 및 협조 등을 받았으며 공동의 사업을 통하여 노점상 및 빈민운동을 미흡하나마 알려 냈다. 그러나 국제노점상대회 관련 실무적으로 집중도를 요구하는 바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할 것이다.

3) 단위별 평가

- ① **실무기획** : '국제노점상연합-전국노점상연합 등 한국조직위'의 연계가 문화/언어의 차이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하지만 한국조직위에 참가하고 있던 다른 단위들과 함께 힘차게 진행함. 노점상인의 통합과 탄핵국면을 경과하면서 한국조직위 공개제안이 다소 늦어졌으며 이에 따라 전노련이 사전에 기획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고 다른 단위와의 '공동활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로 남음.
- ② **정책위** : 국제노점상연합 서울대회 자료집 제작, 토론회 및 간담회 조직 및 섭외, 국제노점상연합 실무진과 프로그램 검토, 국제노점상연합 관련 언론사 및 사회단체 원고제출 및 일정 검토, 각 사회단체 홍보 및 연사섭외.
- ③ **선전 홍보위** : 포스터를 2종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부착토록 하였으며 언론사와 각 사회단체 기관지에 사전/사후 글 기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음. 행사기간 내내 영상촬영을 했으며 영상물 편집을 추진중.
- ④ **문화위** : 개막식 및 국제노점상연합 페스티벌을 준비하여 집행하였다. 개막식의 경우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페스티벌의 경우 홍보 및 진행 등에 있어서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내고 한국 노점상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알려 낼 수 있었다.

4) 실무총평

정치적으로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국제적인 노점상의 문제들이 부각되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속에서 선전 홍보를 해야 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노련 이필두 공동의장의 구속과 더불어 산적한 지역별 현안들이 맞물려 집행력이 분산 되었으며 집행위원장이 3차례 교체되는 문제 등 총체적으로 점

점하는 단위가 부족하였다. 불가피하게 사업의 하중이 실무자에게 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가장 우려했던 통역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었으나 일부는 역량이 미치지 못했다. 사전 진행사항에 대한 공유와 문건 번역 등의 부족으로 안건 및 규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회의진행 중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와 교섭등의 이견이 있었다. 자원봉사자 및 기타 실무자들의 국제노점상대회 관련 위상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처음 치루는 행사와 평소 결의에 비추어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간부 및 실무자들의 헌신성과 노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평가-2

국제노점상서울대회와 관련 국제노점상연합 staff과 한국조직위 공동평가서

한국을 포함해 10개국 15개 단체의 대표 28명이 참가하고 WIEGO에서 참가한 1명과 국제노점상연합 staff 3명을 포함해 총 32명이 함께 한 국제 노점상 서울대회가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여성개발원, (청계천)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등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3월 20일 오후 7시경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국제노점상연합 staff 3인과 한국조직위 담당자들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아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1. 그간 2002년 말, 국제노점상연합이 발족하였지만 임시지도부 체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규약, 정책 등의 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대회를 통해 한국의 전국노점상연합 김홍현 공동의장이 국제노점상연합 의장으로 당선되고 부의장, 재정책임자, 사무총장, 그리고 이외의 국제위원 11명 등 3년 임기의 정식 지도부를 세우고 규약,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국제노점상연합이 올곧게 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 국제노점상연합이 진행한 대회들 중 가장 내실있고 성공적인 대회였다. 특히 비자발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함께 하고 한국 조직위 측에서도 홍보, 조직, 행사준비 등 다양한 면에서 모범을 보였다.
3. 초기에 국제대회 기자회견, 노점상정책 토론회 등에서 국제노점상연합과 한국조직위 간에 이견이 존재했지만 서로가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일치해나갔던 것은 귀감이 된다 할 수 있다.
4. 애초 초청하기로 했던 다른 국제연대단체를 섭외하는데 있어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어 문제 등으로 혼선이 있다보니 결국 이번 대회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WIEGO 외에는 결합한 다른 국제연대단체가 없었다.
5.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서울시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긴 했지만 노점상정책 토론회에 결국 한국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아 심히 안타깝다. 더불어 발제 중심이 아닌 토론 중심의 토론회가 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6. 비단 전노련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다른 단체들이 한국 조직위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대회를 진행한 점이 인상 깊었다.
7. 한국이 직면한 정치상황(탄핵정국, 총선)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방송사 기자들이 본 행사를 취재하고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한국정부에 제기했다. 이것은 대 언론전략에 있어서 성공한 것이라 평가한다.
8. 일부 대회 참가자들이 공항세, 비자발급 비용 등을 청구하여 한국의 동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 이는 한국 동지들의 환대를 오해하여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국제노점상연합의 재정지출 원칙에 따라 영수증이 첨부된 사항들에 한하여 국제노점상연합, 한국조직위가 재정처리를 해나가고 재정을 결산한다.

자료모음



“만국의 노점상이여 단결하라”

| 인터뷰 - 베냉, 클라리스 / 케냐, 찰스 아다

|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4 국제노점상연합 서울대회

| 한국노점상의 현실, 그리고 한국/다른나라정부의 정책

| 보도자료

| 언론보도자료모음

| 노점상의 벨라지오 국제 선언

국제노점상 서울대회에 참가한 베냉의 클라리스입니다



(국제노점상 서울대회에 참여한 타 국가 노점상들의 처지를 알차 편집위에서 인터뷰를 조직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진행한 인터뷰 중 하나입니다.)

▲ 베냉에서 온 클라리스

1. 어느 날, 어느 소속단체에서 오셨는지요?

저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베냉이라 곳에서 왔으며 이름은 클라리스입니다. USYNVEPID라는 노점상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사무실수준에서 시작했다가 투쟁을 통해 성장하였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품목을 하는지?

예. 저는 사무용품과 종이, 음료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입니다.

3. 그 나라에서는 노점상이 전체 인구 중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생활수준은 어떤지요?

베냉은 산업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노동자라는 규정이 거의 없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85%(농민, 어부포함)가 비정규직이며 이중 노점상은 50%이상입니다. 또 하루 0.5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입니다.

※ 베냉은 미용사 등 소위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더군요.

4. 한국에서 노점은 불법이라 하여 정부와 해당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청에서 노점단속반을 구성하여 폭력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합법입니까? 불법이라면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아니지만 투쟁을 통해 성장해서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신구속의 탄압은 흔치 않으나 노점단속은 일상적으로 있으며 형태는 모두 싸늘이 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소속단체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회원은 몇 명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2000년 5월 6일 설립을 했고 회원 수는 2,897명입니다. 주로 여성, 어린이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성보호 차원으로 육아문

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6. 국제노점상연합에는 언제부터 같이 하게 되었으며 국제노점상연합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에 2001년에 국제노점상연합에 가입을 했고 국제노점상 연합을 알게 됨으로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권리를 찾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국제회의 등에서 알게 된 다른 나라의 투쟁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7. 국제노점상서울대회 참가하신 경험과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와 비슷하지만 운영이 매우 잘되고 특히 스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 한국 노점상들에게 연대의 인사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입국하는 날 이필두 의장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냉에 돌아가면 이필두 의장 구속에 대해 한국대사관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보니 언론사에서 취재를 많이 왔는데, 언론에 바라는 것은 정부 측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노점상들을 비롯한 빈민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언론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점상을 비롯한 빈민들의 권리를 널리 알려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도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회의장 밖에 몇몇 회원들이 모여있다. 각 국의 사례를 사진으로 전시하는 것을 보고 계셨나 보다. “신기하네, 다른 나라도 노점상이 있기는 있네.” “이 사람은 과일이고, 이 사람은 옷, 이 사람은 우리 식으로 하면 잡화구만.” “이것 보라고, 다 부서졌어, 강제철거 된 거야. 물건이 전부 망가졌으니 그 속이 오죽할까”

“어, 아프리카도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그랬다. 케냐에서 온 찰스 아다가 말해주는 케냐 노점상의 현실은 한국의 노점상과 닮아 있었다.

“가까이서 죽음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폭력적인 단속으로 노점상들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고 한 명은 임신 중이었는데 배를 걷어차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작년 6월 단속에 제 수레도 철거를 당했습니다. 막아보려다 손목이 부러졌지요.” 이 나라에서도 단속과정 중에 상처입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작년 돌아가신 박봉규열사, 작년

“노점탄압으로 한국의 노점상이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케냐의 노점상이 그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페루에서는 눈물을 흘릴 것이구요.
인도, 남아공에서는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노점상 단체들이 함께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단속에서 세상에 미처 나와보지 못하고 떠난 아기,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 손가락이 부러져라 움켜쥐어야 하는 수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

찰스는 케냐 정부의 노점대책이 허울뿐이라고 말한다.

“케냐정부는 별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꾸준히 설득해서 어렵게 만든 자리에서도 정부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합니다. 우리는 결정하니까 너희는 따라라 하는 식이죠. 안 따르면 물론 단속, 탄압이구요. 노점철폐 후 대책이랍시고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보상에 지나지 않아요.” 청계천 복원 공사를 앞두고 노점상들의 요구를 묵살하더니 끈질긴 투쟁으로 간신히 만들어낸 협의사항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던 서울시, 그리고 찰스가 말하는 케냐 정부. “케냐에서는 노점상의 재산파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법에 의해 정부를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도 복잡한데다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기는 힘들지요. 고소하더라도 중간에 사람들이 지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찰스는 ‘케냐 비공식부문노동자연맹’의 회원이다. 한국의 전노련처럼 노점상(비공식부문 노동자 포함)들의 조직이다. 자율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인 투쟁을 하게 된 케냐의 노점상들은 투쟁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케냐의 일부 지역에서는 의회의 노점상 철거협박에 노점상들이 재판을 걸었고 승리하여 자리를 지켰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노력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단속을 일삼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투쟁으로 대항합니다. 정부의 단속과 탄압에 맞선 투쟁을 통해 많은 것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노점상 단체들, 대학생들과의 연대투쟁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노점상 운동의 경험을 함께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검은 얼굴에 고불고불한 머리,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이 낯설은 젊은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언젠가 한번은 들었던 것처럼 익숙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케냐와 한국이라는 먼 거리를 넘어서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노점상의 현실이 보이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노점상에게 찰스가 하고 싶다고 전한 말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노점상의 국제연대가 무엇인지 어렵듯이나마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단속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한국의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노점탄압으로 한국의 노점상이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케냐의 노점상이 그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페루에서는 눈물을 흘릴 것이구요. 인도, 남아공에서는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노점상 단체들이 함께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4 국제노점상연합 서울대회

전국노점상연합 최인기

1. 국제노점상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인도의 첫 대회에 참석한지 2년이 경과를 하였다. 그사이에 몇 차례의 국제회의에 참가를 더 했고 이러한 성과를 모아 마침내 이번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국제노점상 대회'를 치루게 되었다. '국제노점상대회'의 출발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개별국가를 넘어서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 세계 11개국이 결집하여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아래 자료참조) 그후 세계의 지역별 워크숍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터 실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진행하였고 마침내 2002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더반'에서 세계 20여개국 약 50여명의 노점상과 NGO 활동가들이 모여 '국제노점상연합'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2. 국제노점상연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정과 거리는 물론 특히 언어 소통의 어려운 조건속에서 각국의 노점상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규약으로 채택을 하게된다. 우선 '국제노점상연합'의 가입방식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하나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 각국을 대표 할 수 있는 노점상단체 모두에 폭넓게 열어놓는 것으로 하였다. 이 문제는 한국과 같이 노점상이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주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각국별로 빈곤 해결을 위하여 기득권화된 노점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기아에 허덕이는 노점상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기로 결의를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영세노점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통받는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50% 정도 '리더십' 할당을 공식화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남성들이 주요간부를 맡게되어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을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이밖에도 정치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국제노점상연합' 중앙차원에서는 특정정당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갖되 각국 및 지역은 조건에 맞게 정당 및 정치조직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조직의 투명성을 위하여 자립적인 재정 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회원들의 회비로 조직을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별도로 재정마련을 위한 부설기구로 '노점상신용협동조합', '국제적인 노점상 상품유통과 판매망'을 확립하자는 안을 제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3.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나

최근까지 '국제노점상연합'은 전세계 각국의 노점상들을 대표하여 조직간의 다리 역할을 제공해왔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강화될 노점상 단속에 맞서 공동의 성명을 조직해 줄 것을 제안한 한국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였고 각국의 한국대사관 및 주요정부기관에 국제적인 캠페인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2년 8월 청계천에서 단속에 항의를 하다 분신한 노점상 박봉규열사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재개발과 대단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 노점상등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배제하고 집행되는 문제를 국제회의를 통하여 알려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외에도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조직화와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와 '실무자'들의 방문을 통하여 각국의 노점상들의 현실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태국의 노점상 약 10여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는 등 각국별 노점상들간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4. 우리가 얻은 것들

몇차례 '국제노점상연합' 회의와 교류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한국 정부는 노점상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노점상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해결의 지점을 모색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갖추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 인도 대회의 경우 '비하르주' 시의 시장 및 노동부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공청회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모습이나 남아공의 '더반' 시에서는 시장이 마련한 '리셉션' 자리에서 '이곳은 더 이상 노점상이 불법이 아니다. 노점상은 빈곤해결의 중요한 열쇠로써 앞으로

도 노점상과 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연설을 하며 각국으로 돌아가 이러한 현실을 알려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많은 나라에서 노점상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법적으로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교육, 건강, 보험, 신용 등 여러 방면에서 그 활동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는 민중들의 이해에 복무한다는 소위 '좌파' 정부가 들어선 곳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기 노점상과 정부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5. 2004 국제노점상 서울대회 일정

2004 국제노점상대회'는 3월 16일부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막식을 갖게된다. 이날은 각국에서 참가한 대표들과 한국의 각 부문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갖게되고 개막식장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각국의 벵룩시장이 들어서게 되어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만들게 된다. 3월 17일은 '국제노점상연합'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은 규약개정과 향후 2년 동안 '국제노점상연합'을 이끌고 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밖에 국제대의원 선출과 결의문 채택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의장단 2인이 의장 및 대의원에 출마를 결의하고 있다. 3월 18일은 오전 9시부터 '노점상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은 오전에는 각국의 노점상 정책을 확인하고 '서울시'와 '전국노점상연합'의 입장을 토대로 각 부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노점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날 3월 19일은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품물시장을 무대로 '노점상 페스티벌'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조직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폭넓게 열어두고 각 단체별 중요이슈를 중심으로 캠페인은 물론 재정사업도 겸하게 될 것

이다. 이밖에 참여국가별 대표들과 함께 3. 20 전세계 반전행동 참여까지 '국제노점상대회'는 다양한 계획과 일정들을 상정해 놓고 있다.

6.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현재 일각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허가제와 실명제등 소위 합법화를 모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상반기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용역깡패 발주 및 노점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여전히 노점상들을 사회적인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청소를 해야하는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노점상만의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등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식부문으로 까지 투쟁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새봄에 움터오는 싹을 자르듯 단속을 자행한다 해도 우리는 메마른 아스발트 위의 노점상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제노점상대회' 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음은 한국 조직위 계획으로 제출된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세계 노점상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 국제노점상연합의 첫 국제대회를 성사시킨다

2002년 11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노점상 조직들을 중심으로 국제노점상연합 발족식이 진행됨. 국제노점상연합은 이미 그간의 활동과 각국 노점상조직의 투쟁으로 인도, 남아공 더반, 잠비아 등에서 노점상들이 뽑은 노점상 조직의 대표들이 1주체로서 관계자와 컨소시엄을 통해 노점상 보호 및 권리 확장을 진행하게 됨. 이는 정리하고/불안정노동으로 공식부문에서 배제 된채 거리에서 노동하는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매도

되고 탄압 받는 것에 맞서 국제연대를 통해 단결하고 투쟁할 것을 선포한 것임. 이후 국제노점상연합은 각국에서 노점상 조직을 결성하고 투쟁을 진행해 왔으며 2004년 3월에 한국 서울에서 향후 3년간 국제 노점상 운동을 이끌 공식 지도부를 선출하고 규약개정안과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임.

- 불법으로 매도되고 단결권/단체행동권/기본적 생존권 자체를 탄압 받고 있는 한국 백만 노점상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노점상 대통합과 노점상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 새해벽두부터 노점상조직에 대한 매도와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다시 곳곳에서 용역발주가 시작되고 행정대집행이 일반화된 대대적 노점탄압이 자행되고 있음. 이제 1만 회원 조직을 앞두고 있는 노점상 통합조직의 강화와 미조직 노점상들의 조직화를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본격화하여 6.13 백만노점 총력투쟁대회까지 달려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명실상부한 노점상 대통합 조직에 걸맞게 국제대회를 계기로 비단 단속만이 아닌 다양한 방면(교육, 주거, 보험, 보육 등)에서의 노점상운동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함.

- 한국 사회/사회운동에서 노점상운동, 빈민운동,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을 공유한다.

17년의 노점상 투쟁 역사와 빈민운동 역사에 대해 아직 이해와 결합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번 기회를 통해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노점상운동, 빈민운동,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에 대해 이해지반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멕시코 칸쿤투쟁, 세계사회포럼 등을 계기로 국제연대투쟁이 부각되고 절실해진 상황에서 각 단체(특히, 국제연대 담당자)들과 국제대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7. 마지막으로 검토 할 사항은?

다음은 '국제노점상연합'의 규약 가운데 몇 가지 검토를 해보야 하는 사항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이부분은 아직 전노련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결정 사항은 아니며 문제의식을 검토 차원에서 제기하는 바이다.

우선 가입단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규약 제 2조의 범위를 살펴봤을 때 '국제노점상연합' 본 조직은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연합체, 협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노점상과 같은 조직에 기초한 국가연합조직 및 지역연합, 도시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물론 이들 회원 조직은 국가별 하나의 연합조직을 지향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끼리 서로 통합되기를 지지 받을 것이다 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만 한 국가 안에 국가, 지역, 도시에 하나 이상의 회원 조직을 둘 수 있게 되어있다. 연동하여 5조를 살펴보면 회원수에 기초해 비례대표 대의원으로 결정된다. 로 되어있다. 즉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여러개의 노점상 조직과 많은 수의 대의원이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랬을 때 자칫 각 국가별로 처해있는 다양한 조건이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조직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이 구성이 되고 주요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의 숫자에 의해 의결권이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와는 상관없이 국가별로 일정한 대의원 수를 공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래야 현재의 낮은 수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각국별로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각 국가별 정치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노점상이란 경제적 이해를 함께 하는 대중조직의 국제적인 연합체로서 규약에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각 국가별 조건을 반영하여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국제노점상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카공화국은 진보적인 정당(ANC)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도의 경우 많은 여러 주에서 한국과는 달리 진보정당과 소위 사회주의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노점상과 주 정부와의 파트너쉽과 협력관계가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경우는 노점상과 정부 상호간에 대단히 극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이번 국제대회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한국의 정치적인 조건을 충분히 배려하는 자세보다는 관례적으로 위의 주도하는 몇몇 나라별 정치적인 특성을 한국의 전노련에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노점상과 정부간의 관계 못지 않게 문화적인 배려를 서로 인정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로 소위 포드펀드라 할 수 있는 초국적 자본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한다. '국제노점상연합' 차원의 행사와 국제회의를 치루기 위해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자원은 '국제노점상연합'의 자주성과 더불어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순수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우선 조직 구성 중8조 및 9조를 10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직은 '국제노점상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 3년에 한번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대의원급의 대표자들의 정례회의가 있으며 상근자를 중심으로 한 사무국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간 언어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기에는 많은 아직은 느슨한 협의적인 네트워크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랬을 때 단일한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 3년 동안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사 숙고를 해야 한다. 특히 매년 11인이 모여 개최하게 되어 있는 국제회의의 경우 국가간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반듯이 규약에 대의원을 대륙간으로 배치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 대한 결정은 대륙별 회의를 통해서 한다. 코디네이터에 대한 조항이 지나치게 자

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으며 별도의 내규나 지침정도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여섯째 '국제노점상연합' 안에는 소위 미국과 EU에 속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 및 일본과 같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 나라에도 노점상이 존재하겠으나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한 제 3세계의 국가의 억압과 착취라는 측면에서 노점상 및 비공식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발생원인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기구인 WTO, IMF, 세계 은행과 같은 기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문제는 당장 '국제노점상연합' 이라는 국제적 대중조직의 조건과 현실 그리고 이제막 첫걸음을 걷는 조건 속에서 공론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히 노점상간의 네트워크 수준을 넘는 세계노점상의 생존권 박탈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지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 빈곤과 양극화를 낳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노점상연합' 은 좀더 진전된 정치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는 문제는 향후 방향과 진로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노점상의 현실, 그리고 한국/다른나라정부의 정책

1. 우리 한국 노점상의 현실과 한국정부의 노점상정책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직장이나 가게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거리에 나온 노점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연을 맞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용역강패와 공권력, 온갖 왜곡에 맞서 질기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당장 단속에 맞서 함께 투쟁하려고 전노련을 만들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용인하면 또 다른 불법이 양성될 뿐이다. 어떤 대책도 없다."

- 2003년 2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 중

"불법노점상 **들이 단체를 만들어 무슨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그래."

- 2003년 12월, 도봉경찰서 측이 김홍현 의장을 연행하면서 한 발언 중

우리 한국 노점상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이 먹고 살길은 터주어야 할 정부나 지자체가 오히려 우리더러 시민의 보행을 막는다느니 위생/미관에 안좋다느니 하면서 '불법' 딱지를 붙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단결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90년대 말부터 용역강패를

발주시켜 폭력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무차별적으로 부과하여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책임부서도 마련하지 않고 노점탄압을 방조하면서 노점상더러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자들은 지난 11월 30일에 청계천 행정대집행을 저지르면서 당일 28억원의 세금을 써버렸으며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동원하여 조직 폭력배들의 바람막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간 전노련을 만들고 함께 투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하였고 생존권을 쟁취해왔습니다. 최근 울산 중구청, 대구시가 노점상을 양성화하겠다고 선포한 것,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대책없는 노점단속을 반대한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우리의 투쟁을 통해 노점상의 존재자체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에게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해서 '단속유보' 식의 어정쩡한 대책이 나오기 일쑤이며 대구시나 울산 중구청의 경우도 노점상단체를 전면배제하여 노점상의 입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점상을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노점상을 자기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 다른 나라 노점상의 현실과 해당 나라의 노점상정책

최근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은 미군을 동원하여 노점상 단속을 자행하고 있으며 홍콩은 중국에 편입된 이후 가로정비의 명목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곧 노점상에 대한 전통적 대책은

그들을(노점상을) 없애는 것일 뿐이었습니다.(혹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아시다시피 손님들도 없어서 어떤 수입도 올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옮겨 고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중산층보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법적/인간적 권리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제 세계적 추세는 바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더욱 더 강한 조직을 만들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면서, 더불어 단속위주의 노점상정책은 빈곤/실업 등의 문제로 인해 생계를 위해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국의 현실을 볼 때 비현실적인 정책이고 세금만 낭비할 뿐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노점상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선진국들의 경우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노점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풍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세금을 받는 형식으로 노점상을 양성화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노점상정책은 한계가 많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노점정책을 한국정부/서울시가 인용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홍콩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제노점상연합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노점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결국 일부 노점상에 한해 장사를 보장하는 정책일 뿐이었습니다. 노점상의 입장에서 노점상의 의견과 노점상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선진'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홍콩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8000여개의 노점상을 합법화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외 40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노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규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것이 홍콩 노점상정책의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불안하여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중국 본토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노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말이며 허가받은 노점상도 몇몇 시장에 수용해놓은 형식이 강해서

노점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고사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 적인 노점상 정책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아공 더반에는 '노점상은 비공식노동자이며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정책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노점을 위한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8년 전, 해변마다 깔끔한 원두막과 가로수, 형광시설, 저장고를 보장하여 노점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점, 도시개발계획도 노점상대표와 함께 논의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아공에서도 처음에는 소위 선진국 사례를 인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선진' 적이지 못한 노점상정책이었기에 남아공 노점상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새로운 노점상정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아공 더반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인도, 잠비아, 가나 등에서는 노점상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노점상단체의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정부관계자 등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경우 아래 인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의 입장에서 노점상을 당당한 1주체로 존중하고 있고 비단 인정여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험, 신용, 교육, 보육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례 인도정부의 노점상정책

'경찰, 기업, 노점상, 상인, 정부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Task Force를 통해 '노점상에 대한 정부정책'을 세워낸 바 있음.

"노점상은 비단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진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주정부는 생계를 위한 이러한 노점상(시민의 일부이기도 한)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노점상에 대한 인도정부의 정책' 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노점상을 사회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노점상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라도 노점상 조직 및 노점상 단결권이 절실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더불어 "강제철거, '미관을 이유로 한 노점단속'은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의 편의를 짓밟는 것이므로 엄격히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율질서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불어 위생문제, 보행문제, 일부 기업형 노점문제 등 부정적 문제들을 우리가 이 사회의 한 주체라는 점을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노점상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89년 9월에는 '노점상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영업시간과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노점상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노점상 양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노점상관리조례(안)'이 청와대와 내무부가 참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 제출되기도 했고 "노점상은 외국의 경우 도로교통에 그리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양성화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실정에 맞게 노점상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서울시 건설행정과 "외국의 노점상 관리제도 비교연구 해외출장 보고서" 중, 1993)라는 보고서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국제연대운동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긍정적 정책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단속, 과태료 문제, 더불어 아이들 보육과 교육, 매연을 마시며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도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해지고 있는 건강문제 등에 대해 전노련을 중심으로 함께 대응하고 함께 투쟁합시다.

2004 세계 노점상들의 국제대회 서울에서 열리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이 모여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듣기에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2004 국제노점상 서울대회'를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3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행사를 갖게 된다. 잠시 일정을 살펴보면 16일 개막식에는 각국에서 참가한 대표들과 한국의 각 부문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만들며 행사장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각국의 비록시장이 들어서게 된다. 3월 17일은 하루종일 '국제노점상연합' 회의를 통하여 규약개정과 지도부 선출 그리고 국제대의원 선출과 결의문 채택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두 명이 의장 및 대의원에 출마를 결의하고 있다. 3월 18일은 '노점상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은 각국의 노점상 정책을 들어보고 한국의 각 부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노점상에 대한 해결책과 모색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공식 행사 마지막날 3월 19일은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을 무대로 '노점상 페스티벌'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의 행사에는 한국의 단체들과 각국의 노점상 단체에 폭넓게 행사 프로그램을 열어두고 재정사업과 각 단체별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문화 행사를 갖게 된다. 이밖에 국제노점상대회는 참여국가별 대표들과 함께 3. 20 이라크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 참여까지 일정을 상정해 놓고 있다.

각국의 노점상들의 현실은 어떤가

노점상 나아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과 탄압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빈곤과 엄청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점상에 대하여 파트너쉽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점상 문제는 오래 전부터 단속을 통한 사회적인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노점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 법적인 잣대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알려내고 용역반을 동원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세금만 낭비일 뿐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와 각지방자치단체에 노점상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노점상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전국노점상연합'은 결성 된지 17년의 기간동안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많은 사업과 실천을 전개 해왔다. 과정 속에서 수많은 투쟁과 엄청난 희생을 치루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성과는 매우 희박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허가제와 실명제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있지만 아직도 노점상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파트너쉽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상반기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사회기강확립 및 봄철 환경미화라는 명분하에 전국적으로 용역깡패를 발주하여 노점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어찌보면 지금은 작년 청계천 노점상에 대한 투쟁이후 사회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이슈화하기 가장 좋은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공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비정규직 노동

자, 가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가난하고 소외 받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삶을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왜곡과 단속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제노점상대회'로 만들고자 한다. 이번 대회가 단순히 회의와 몇가지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노점상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노힘 기관지

세계 노점상들의 국제대회 서울에서 열린다

국제노점상연합은 1995년을 시작으로 그동안 약 11개 국가에서 정부를 상대로 노점상들의 가시성, 발언권, 교섭권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성장해 왔다. 한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경기에 노점상 단속관련 특별성명을 채택 각국의 한국대사관 및 한국정부의 단속에 항의를 하는 등 노점상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다양한 실천과 투쟁을 전개 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모아 2004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 노점상 서울대회'를 여러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치루게 되었다.

- 간략하게 살펴본 국제노점상대회

일정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3월 8일 '국제노점상연합' 측 staff인 Pat과 Nozipho 입국을 하게되며 이날부터 그동안 한국조직위와 함께 준비해온 전체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검토하게 된다. 3월 16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막식을 갖게된다. 이날은 각국에서 참가한 대표들과 한국의 각 부문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갖게되고 개막식장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각국의 베틀시장이 들어서게 되어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만들게 된다.

3월 17일은 하루종일 '국제노점상연합' 회의를 통하여 규약개정과 지도부 선출 그리고 국제대의원 선출과 결의문 채택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두명의 공동의장이 의장 및 대의원에 출마를 결의하고 있다. 3월 18일은 '노점상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를 통하여 각국의 노점상 정책을 확인하고 한국의 각 부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노점상에 대한 해결책과 모색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밖에 오후에는 주제토론을 통하여 노점상을 둘러싼 직 간접적인 세부 주제로 한국조직위에 참여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인도 비공식부문 단체' 간담회와 '비정규직/비공식 노동자들의 상황과 기본권' 또는 '빈곤과 비정규직/비공식 노동자'를 주제로 세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마지막날 3월 19일은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을 무대로 '노점상 페스티벌'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조직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폭넓게 열어두고 재정사업과 각 단체별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국제노점상대회는 참여국가별 대표들과 함께 3. 20 이라크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 참여까지 일정을 상정해 놓고 있다.

-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현재 정부는 상반기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용역강패 발

주 및 노점단속을 추진 중에 있고 일각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허가제와 실명제 등 소위 합법화를 모색 중에 있다. 노점상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청계천 주변의 대대적인 단속이후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가장 좋은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노점상만의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등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길거리에서조차 내몰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제노점상대회' 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민주연대 사람이 사람에게 (2004년 4월)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4 국제노점상연합 서울대회

1. 국제노점상연합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지난 '사람이 사람에게 2002년 통권 14호 지구촌연대란' 에 '노점상의 국제연대 시작되다' 라는 주제로 '국제노점상아시아지역대회' 참가기를 실은바 있다. 그리고 2년이 경과를 하였다. 우리는 그사이에 몇 차례의 국제회의에 참가를 더 했고 이러한 성과를 모아 마침내 이번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국제노점상대회' 를 치루게 되었다. '국제노점상대회' 의 출발은 1995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별국가를 넘어서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세계 11개국 이 결집하여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선언' 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세계의 지역별 워크숍을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실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진행하였고 마침내 2002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더반' 에서 세계 20여개국 약 50여명의 노점상과 NGO 활동가들이 모여 '국제노점상연합' 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참가 조직은 40개국 107개 조직으로 성장을 하였다.

2. 국제노점상연합에 대하여 알아보자

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정과 거리는 물론 특히 언어 소통의 어려운 조건속에서 각국의 노점상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규약으로 채택을 하게된다. 우선 '국제노점상연합' 의 가입방식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하나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 각국을 대표 할 수 있는 노점상 단체 모두에 폭넓게 열어놓는 것으로 하였다. 이 문제는 한국과 같이 노점상이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주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각국별로 빈곤 해결을 위하여 기득권화된 노점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기아에 허덕이는 노점상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기로 결의를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영세노점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통받는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리더십' 을 확보하기 위해 50% 정도 '리더십' 할당을 공식화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남성들이 주요간부를 맡게되어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을 극복하지는 취지였다. 이밖에도 정치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국제노점상연합' 중앙차원에서는 특정정당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갖되 각 국가 및 지역은 조건에 맞게 정당 및 정치조직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조직의 투명성을 위하여 자립적인 재정 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써 회원들의 회비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별도로 재정마련을 위한 부설기구로 '노점상신용협동조합', '국제적인 노점상 상품유통과 판매망'을 확립하자는 안을 제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3.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나

최근까지 '국제노점상연합'은 전세계 각국의 노점상들을 대표하여 조직간의 다리 역할을 제공해왔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강화될 노점상 단속에 맞서 공동의 성명을 조직해 줄 것을 제안한 한국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였고 각국의 한국대사관 및 주요정부기관에 국제적인 캠페인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2년 8월 청계천에서 단속에 항의를 하다 분신한 노점상 박봉규열사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재개발과 대단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 노점상등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배제하고 집행되는 문제를 국제회의를 통하여 알려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외에도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조직화와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와 '실무자'들의 방문을 통하여 각국의 노점상들의 현실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태국의 노점상 약 10여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는 등 각국별 노점상들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4. 우리가 얻은 것들

몇차례 '국제노점상연합' 회의와 교류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한국은 정부가 노점상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노점상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해결의 지점을 모색 할 수 있는 파트너쉽 이 갖추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 인도 대회의 경우 '비하르주' 시의 시장 및 노동부 관계자들 및 공무원들과 공청회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나 남아공의 '더반' 시에서는 시장이 마련한 '리셉션' 자리에서 '이곳은 더 이상 노점상이 불법이 아니다. 노점상은 빈곤해결의 중요한 열쇠로써 앞으로 노점상과 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연설을 하며 각국으로 돌아가 이러한 현실을 알려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많은 나라에서 노점상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법적으로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교육, 건강, 보험, 신용 등 여러 방면에서 그 활동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는 민중들의 이해에 복무한다는 소위 '좌파' 정부가 들어선 곳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기 노점상과 정부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5. 2004 국제노점상 서울대회

2004 국제노점상대회는 3월 16일부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막식을 갖게된다. 이날은 각국에서 참가한 대표들과 한국의 각 부문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갖게되고 개막식장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각국의 벵룩시장이 들어서게 되어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만들게 된다. 3월 17일은 '국제노점상연합'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은 규약개정과 향후 2년 동안 '국제노점상연합'을 이끌고 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밖에 국제대의원 선출과 결의문 채택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국노점상연합'에서는 공동의장 2인이 의장 및 대의원에 출마를 결의하고 있다. 3월 18일은 오전 9시부터 '노점상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오전에는 각국의 노점상 정책을 확인하고 '서울시'와 '전국노점상연합'의 입장을 토대로 각 부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노점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오후에는 '테마토론'을 통하여 노점상을 둘러싼 직 간접적인 세부주제로 한국조직위에 참여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인도 비공식부문 단체'와의 간담회와 '비정규직/비공식 노동자들의 상황과 기본권' 또는 '빈곤과 비정규직/비공식 노동자'를 주제로 세부토론회

를 개최하게 된다. 마지막날 3월 19일은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을 무대로 '노점상 페스티벌' 및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조직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폭넓게 열어두고 각 단체별 이슈를 중심으로 캠페인은 물론 재정사업도 겸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참여국가별 대표들과 함께 3. 20 이라크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 참여까지 '국제노점상대회'는 다양한 계획과 일정들을 상정해 놓고 있다.

6.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현재 일각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허가제와 실명제등 소위 합법화를 모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상반기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용역강패 발주 및 노점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여전히 노점상들을 사회적인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청소를 해야하는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노점상만의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등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새봄에 움터오는 싹을 자르듯 단속을 자행한다 해도 우리는 메마른 아스팔트 위의 노점상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제노점상대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한국개최의 의미 : 우리의 노동을, 우리의 기본권을 당당히 이야기하자!

전국노점상연합 국제국 신회철

1. 세계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다

'비공식부문'¹⁾, '비공식부문 노동자'!

생소한 말이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불안정 노동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바로 비공식부문, 비공식부문 노동자다. 실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핸드폰과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장식품, 그리고 그 가방, 예쁜 큐빅이 박힌 머리핀, 모자, 장난감, 컵, 맛있는 떡볶기와 핫도그가 사실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거나 팔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텔레비전, 컴퓨터, 자동차,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사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손과 중소기업사업장을 거친 후 대공장에서 완제품으

1) 확실한 계약, 노동 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는 노동자로서 '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 '비공식 일자리의 유급 고용'을 말한다. 이는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유급노동자들 모두 확실한 계약, 노동 급부, 사회적 보호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공식부문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흔히 조직되지 않아 (자신들의)요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둘 간에 일정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자본과 상품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비공식 유급 노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관련자들과 교섭력이 저조하고 특히 자가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관과 시장의 경쟁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지만 힘이 없는 상황이다. ('비공식 고용'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정의)

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것 이상으로 비공식부문, 그리고 비공식부문노동자들의 의미와 기본권은 인정되지 못해왔다. 우리 노점상의 경우도 여전히 '비공식부문=불법'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상적인 단속과 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십년간 제3세계국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제임이 인식되면서 점차 국제적인 연대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명시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에게 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1. 자본의 세계화는 비공식부문 노동을 보편화하고 증가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적인 침탈과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제3세계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해결책은 다시 IMF 등 세계 금융자본에 의해 강제되었으며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재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다시 '비정규직→비공식부문'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않으며 조직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비공식부문 노동의 증가가 이윤창출에 혈안이 된 자신들의 이해에 딱 맞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노동은 지난 10년간 북아프리카에서 비농업 노동자의 43%, 아프리카 노동자의 74%, 라틴아메리카 노동자의 57%, 아시아 노동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사

하라 사막 이남의 비공식부문 노동자 수는 도시 노동력의 60%를 넘었으며, 인도노동자의 88%,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의 74%, 태국노동자의 70%,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65%, IMF 이전 한국노동자의 41%가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조차 GDP의 15%를 차지하게 된 비공식부문 노동의 범위와 영역, 인원, 수입창출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경기하강시기에는 더욱 비공식 경제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2.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세계화는 결국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보편화하고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는 다시 자본 스스로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결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 자본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수단으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실제 공식부문 고용이 연간 2.1% 성장에 그친 반면 비공식부문 고용은 3.9%로 늘어났으며(국제노동기구 발표) 199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분야는 도시 비공식부문이었는데, 10개의 새로운 일자리 중 평균 6개가 영세소규모기업(micro-enterprises)과 자신을 위한 노동자들(own-account workers)과 가사서비스(domestic services)에서 창출되었고 1990년대 아프리카에서 모든 추가적인 일자리의 93% 이상이 비공식부문에서 창출되었다. 반면에 공식부문 고용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고용함에 따라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고용창출의 주요한 수단으로 비공식부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Mr. Juan Somavia 사무총장이 2000년 2월 인도를 방문했을 때 한 연설과 국제노동기구(ILO) 남아시아 대륙국장인 Van Der Laan이 2003년 12월 '비공식부문 노동자조직활동 국제대회'에 참

석하여 한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은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작은 기업을 미래의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은 무역, 기술, 금융, 경제 분야에 많은 것을 제공해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 일자리 제공자가 될 것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디서 우리 사회의 고용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그 대답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일자리가 창조되고 있는 작은 기업들에 있다는 것이다.”
(Juan Somavia, ILO 사무총장, 2002년 2월 연설중)

“자유화와 세계화가 노동시장의 비공식화를 강화하였다. 이에 ILO 국제 노동 총회에서는 2002년에 ‘비공식부문’이라는 말을 ‘비공식경제’로 바꾸어 법외의 모든 비공식경제를 다루도록 하였다.²⁾ 2002년 총회에서는 ‘양질의 노동’을 강조하였으며 비공식부문 비공식경제에서도 양질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권리와 사회적 보호가 적으며, 사회적 대화와 교섭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다루도록 하였다.

ILO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단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의 대표성을 띠고 사회적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참여가 없이는 비공식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해야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

(Van Der Laan, ILO 남아시아 대륙국장,
2003년 12월 ‘비공식부문 노동자조직활동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한 연설 중)

2) 이 ‘비공식 고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참으로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고용 특성과 관계 면에서 비공식성을 정의하므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비공식부문’과 관련한 오래된 의견이 비공식 노동자들이 등록, 세금과 같은 공식성을 회피했다고 본 것에 비해 ‘비공식 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의견을 통해 비공식 노동자들이 확실한 노동, 노동 급부, 사회적 보호 및 조직을 통한 이해의 관철 등 공식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다.

○ 경제성장으로 실업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왔음. 하지만 고용 증가의 많은 부분이 불안정하고 비생산적인 소위 비공식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징으로 인식되어온 비공식부문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새로운 하청계약 메커니즘으로 산업화된 경제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에는 비공식부문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공식부문과 경계에 있는 부문은 점진적으로 공식경제에 통합된다고 생각되었으나 그간 ‘공식부문의 비공식화’가 증대되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됨.

○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 기업들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음. 가내부업과 다양한 하청계약 형태의 출현은 경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음.

○ 비공식부문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점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소득을 위한 노동집약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음.

○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공급측면의 접근방법을 넘어서야 할 것임.

○ 그 밖에도 훈련, 신용, 인프라기반, 기술 및 기업 자문 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비공식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아웃 소싱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등에 의한 수요측면에서의 관심증대가 수반되어야 함.

○ 비공식부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빈곤노동자의 증가 문제임.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은 비생산적인 고용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 노동의 질과 양 즉, 사회적 보호와 직업 창출 간에 상충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개선된 작업 환경이 동료 노동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반드시 잠식시키지 않고 생산성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경향도 있음. 따라서, 노동자들이 빈곤을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실업의 증가를 의미해서는 안 됨.

○ 빈곤 노동층을 위한 전략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간에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작업장에서의 조직과 참여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함.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평가 및 제38차 사회개발위원회 결과보고서 /2000.2.8~2.17, 뉴욕 유엔본부/ 중)

1.3. 불안정노동의 철폐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과 한 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노점상들은, 그리고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달리 살 길이 없어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려 하루하루를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과제로 삼아야 하며 더불어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 인정! 비공식부문의 공식화!”를 내세워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공식부문에 불안정노동을 야기하고 그 영향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그마저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람들을 비공식부문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외쳐왔던 “노점합법 쟁취”는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를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라”는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코 울산 중구청,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노점상의 양성화라든지 서울시가 애초 추진했던 ‘노점상의 가로판매대로의 흡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로서 노점상을 일부 인정한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어떠한 기본권도, 발언권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가진자들의, 자본의 노예로 절락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2003년 12월 인도 Ahmedabad에서 진행된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활동 국제대회’ (Ahmedabad 대회)에서도 천명했던 것처럼, 세계 노동/민중운동은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과 함께 운동의 전

환을 꺾고 있다. 이런 면에서 Ahmedabad의 결의문은 우리에게 그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의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Ahmedabad대회는 2002년 국제 노동 회의에서 비공식 경제에서의 인간다운 노동”과 관련한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주목한다. 이 결의의 결과에 비추어 Ahmedabad 대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한 노동자로서의 권리, 특히 단결권을 가져야 함을 느꼈다. 즉,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와, 이를 통해 생활/노동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 많은 나라들에서의 노동 법률이 일정 기간 반추되지 못하였고 분산된 채로 방치되어 왔으며 비공식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노동 법률이 ‘노동자-자본가 관계’를 전제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 비공식 노동자들의 단체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이 현 노동법률을 반추해야 한다. 법률들을 일치시키고 가능한 많은 고용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 동등한 지위로 비공식 노동자들의 조직을 세워야 한다. 어떤 법적 기구와 보호를 통해 노동 법률을 바라볼지 알기 위함이다.

○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정책, 규정, 법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협회, 회원중심 단체들과 NGO(비국가기구)들간에 연합조직에 함께하거나 연결시켜야 한다.

○ 정부에게 요구한다. 안정하고 인간다운 노동의 광범위한 창출을 위해 범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라. 비공식 고용을 경제적/사회적 개발 정책의 중심에서 고려하라. 빈곤 완화를 위해, 그리고 보호적 법률과 사회적 보호를 신분/지위 여하의 구별없이 확장하라.

○ 노동조합들에게 요구한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공식/비공식 노동자들 모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조를 변화하거나 창출하라. 이는 비공식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의 구체적 요구를 받아 얻을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개진을 권

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육, 법적 도움, 의료 보험 기구, 신용,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여 이를 구성하라.”

2. 국제노점상연합이 펼쳐고 있는 활동과 현실적 한계

2.1. 국제노점상연합과 그 활동

국제노점상연합은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세계 11개국에 의해 1995년 틀거리를 갖추고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의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자가고용 여성연합), 남아공 더반의 SEWU(Self-Employed Women’s Union, 자가고용 여성연맹), 뉴욕의 ‘여성 국제은행’, 뉴욕의 ‘여성과 신용연합’, WIEGO(Women in Informal Economy Globalizing and Organizing, 세계화/조직화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이 그 창립과 활동에서 중심역할을 하였다. 이후 약 3년 정도 세계 대륙별 워크숍을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실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진행하고 2002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세계 20여개국 약 50여명의 노점상(혹은 활동가)들이 모여 국제노점상연합을 발족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국제노점상연합은 12개국 15개단체 275,472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국제노점상연합은 그간 대부분의 빈민문제가 NGO나 단체들의 몫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일반 빈민으로 구성된 주체적인 대중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현실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 3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발정책에 부딪치면서 노점상과 철거민 그리고 인력거나 지게꾼들의 저항이 시작이 되어 소외되거나 단속과 철거로 생존권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노점상 조직들이 건설될 수 있었음을 주목하면서 세계적으로 노점상/비공식부문 노동자 대

중조직을 건설해나가기 시작했다. 더불어 가시성, 발언권, 교섭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들 간에 개별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고 이 네트워크는 전세계를 통틀어 개별 노점상과 활동가, 연구가, 그리고 노점상들을 지원하는 각종 기구들을 포괄했다.

국제노점상연합은 비단 ‘노점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비공식부문 노동자’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 WTO(국제무역기구)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에 노점상/비공식부문 노동자 대중조직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대화하며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 공식부문 노동조합이나 정규직노조, 사회단체들을 만나 설득하고 함께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노점상연합은 세계화가 여성을 비공식부문으로 내몰고 특히 빈곤에 빠뜨리세 하는 것에 맞서 여성운동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조직 자체적으로 여성활동제를 실시하고 있고 가내노동자 네트워크, 아동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2.2. 국제노점상연합의 현실적 한계

국제노점상연합의 현실적 한계 중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모호성’과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재정의론’을 들 수 있다.

국제노점상연합과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 이미 각 대륙별 워크숍과 국제노점상연합 발족식에서 “국제노점상연합은 특정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국 상황상 국제노점상연합에 소속된 각 단체들은 각국 정당과의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결정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떠나서 세계화와 금융자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제금융기관이 빈곤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야기하고 있지만 국제노점상연합 아시아 워크숍에서 결정된 것은 “국제노점상연

합은 WTO,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정부 기관을 영원한 적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제노점상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찬성한다면 모든 기관들과 함께 해야 한다.”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운동의 구심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 국제노점상연합과 국제노점상연합 소속 여러 단체들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을 기부받아 국제/대륙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아시아 워크샵에서 “국제노점상연합은 재정적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소속 단체들 중에 규모가 작은 대중조직들이 많아 정기적인 회비로 운영이 어렵긴 하지만 포드기금과 같이 창설 초기에 CIA의 자금줄이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곤 했던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직의 자립이 아니라 조직의 금융기관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3. 한국 민중운동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20여개국 60여명의 국제노점상연합 소속 단체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민중운동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아래와 같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3.1. 한국 노점상운동에 있어

한국 노점상운동은, 특히 전국노점상연합 운동은 1989년 이래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간 노점상의 단결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부단한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점상의 존재의미와 노점상 생존권은 ‘불법노점상’이라는 매도에 의해 묻히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투쟁이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노점상의 기본권과 빈민운동의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노점상과 노점상단체의 면에서 여러 노점상들이 노

점상단체를 ‘단속이 있을 때 필요한 조직’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인도, 잠비아, 남아공에서는 노점상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법적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다. 더불어 노점상이 처한 교육, 건강, 보험, 신용 등 여러 방면에서 그 활동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전노련은 단결된 투쟁의 역사와 조직운영의 역사를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더불어 그들의 활동을 통해 전노련의 활동을 확장/강화할 수 있는 밑바탕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2. 한국 빈민운동에 있어

한국의 전국빈민연합과 같이 빈민대중조직이 독자적으로 세워져 활동하고 있는 곳이 없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조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주거공간의 철거문제는 한국 철거민운동의 1970년대 대량이주와 지역별 투쟁에 머물렀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주택점거운동, 토지점거운동 등 우리에게 참오할만한 여러 투쟁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주거문제에 대해 가수용/영구임대, 지역공동체 운동 등 한국 철거민/빈민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운동 수준으로 상승하지 못한채 “주거대책 보장하라”라는 구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빈민운동 진영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타국의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3.3. 한국 민중운동에 있어

아직 노점상, 빈민, 가내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 운동이 한국 민중운동에 뿌리를 정착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아직 현실에서 노점상문제의 해결을 용역을 통한 단속으로 바라보는 일부 조합주의적인 경향도 있으

며 정규직 대공장노조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정규직-비정규직-비공식’ 노동자들간의 수평적 연대와 실천적 연대운동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비공식부문 노동자운동에 이제 막 그 시작을 천명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비공식부문의 배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공식부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 민중운동이 그 실천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가 유의미하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점상은 신자유주의-자본독점의 산물”

월드컵, 국제회의, 국민방문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강제철거 되는 노점상. 이들이 중심이 돼 국제대회를 열었다.

16일 오전 국제노점상연합(Street Net International)과 한국조직위원회(전국노점상연합 외 4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국제노점상서울대회’ 개막식이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제노점상대회는 95년 국제노점상네트워크가 구축된 이래 3년을 주기로 각국 노점상들과 이에 연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함께하는 국제대회이다.

대회참가도 어려워

사회의 구조적 차별의 최전방에 위치한 노점상들은 대회 개최 과정에서도 다른 국제대회와 달리 차별을 받았다.

김홍현 전국노점상연합 공동의장은 환영사에서 앞서 “visa 발급지연, 입국 방해 등으로 다수의 국제대표들이 입국하지 못했다”며 “노점상들은 공식적인 국제대회 개최마저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어제(15일) 이필두 전국노점상연합 공동의장이 전격 연행,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과거 투쟁 과정 속에서 생긴 범법행위를 근거로, 행사 하루 앞두고 연행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번 행사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세계화-반독점 투쟁을 전개해야”

이날 발언 중에는 노점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지적과 함께 투쟁방향에 관한 주장도 있었다.

김 의장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자-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노점상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의 극대화, 독점자본의 만행으로 노점상이 발생 한다”며 김 의장의 주장을 부연했다. 또 백 소장은 “다른 싸움은 먹고, 자고, 공부도 하면서 투쟁을 할 수 있지만, 노점상의 투쟁은 잠시라도 쉬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며 “한 발짝만 물러나도 죽는다”고 주장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투쟁방향에 대해 “노점상은 세계화의 ‘눈물의 씨앗’”이라며 “제3세계 민중들과 연대해 반세계화 투쟁을 통해서만이 노점상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노점상대회, 각 국 노점상들이 모인 축제의 장

이번 국제노점상서울대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이번 서울대회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 ▲ 외국인 노점상 ▲ 어린이 노숙자 ▲ 규약 개정과 신임 지도부 선거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그간 임시대표 체제로 운영하던 국제노점상연합의 정식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종 토론회와 문화행사가 4일 행사 기간 중 진행된다.

오는 18일 오전 11시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는 각 국의 노점정책 사례와 함께 한국의 노점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한국 노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노점상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진행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황과 기본권에 대한 자유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 청계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에서 각 국 대표들이 참여해 각 각의 부스와 좌판을 차리는 등 ‘국제 노점상 페스티벌’이 열린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전국노점상연합 등은 청계천 개발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경락/기자

경향신문 2004-03-17 20:01

[논설/여적] 노 점 상

노점상은 언제나 단속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좌판을 벌여야 하는 노점상들의 저항과 당국의 단속은 다람쥐 쳇바퀴와 너무나 똑같다. 단속반이 좌판이나 리어카를 엮기라도 하면 노점상들은 자신 보다는 좌판과 리어카, 물건들이 상할까봐 몸을 날려 죽기살기로 보호하곤 한다.

길거리에서 가끔 이런 광경과 맞닥뜨리지만 정작 쏟아진 물건을 챙겨주거나 단속반에게 “심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용기가 제대로 없거나 무관심해, 서로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현실이 야속할 따름이다.

그래도 작은 여유를 갖게 해주는 곳이 노점상이다. 따뜻한 국물과 갓 구워낸 닭똥집에 곁들인 소주 한잔으로 퇴근길을 달래주는 포장마차를 비롯해 채소·과일, 구뚝주걱 등 온갖 생필품을 파는 리어카에 이르기까지 노점상은 실로 다양하다. 넓은 도포에 갓을 쓴 점잖은 노인네가 기다란 곰방대를 물고 길

거리 좌판에 앉아있는 개화기 때 풍물사진 모습은 정겹기까지 하다.

노점상은 어느 나라나 위상이 비슷하다. 이웃 중국만 해도 노점상은 세금 안내는 골치 아픈 존재이며 미관과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단속이 흔하다. 중국인도 아침을 사먹기 때문에 자오판(朝飯)이란 밥 파는 노점상이 많다. 가장 큰 노점거리인 헨진의 빈장타오도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상가로 탈바꿈 중이다. 우리의 대표적 노점거리였던 청계천과 황학동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세계 20여개국 노점상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노점상연합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노점정책을 진단, 노점상의 권익 보호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단속에 떨며 뒷그늘에만 머물러야 했던 노점상들의 안타깝고 필사적인 대응인 셈이다. 이제 노점상의 생존권과 서민의 애환까지 보존할 방안을 당국이 제시할 때가 됐다. 나아가 우리도 유럽이나 태국 야시장처럼 노점거리를 '문화벨트'로 가꾸어야 한다.

김용재는설위원 suala@kyunghyang.com

한겨레21 2004-03-24 05:02

만국의 노점상이여 단결하라

각 나라에서 불법단속에 쫓겨온 '국제노점상연합' 회원들,
한국에 모여 희망을 이야기하다

"10살 때부터지금까지 거리에서 과일과 야채를 팔았다. 16살 때 결혼해 아

이 다섯을 낳았지만 학교에도 못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장사를 했다. 화장실도 물도 없는데서 장사하며 경찰들에게 많이 맞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힘이 없었다. 글도 몰랐고 법도 몰랐다. 그러나 여성노점상모임이 생기면서 글을 배우게 됐고, 나의 권리도 알게 됐다. 우리는 보육센터도 세워 장사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본다." 인도에서 온 마흔여덟살의 여성 노점상 사리타 마니벤의 얼굴은 밝았다. 그녀가 활동하고 있는 빈곤에 맞서는 인도 여성들의 조직인 '자가고용여성노동자협회'(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는 인도에서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기 시작한 1972년에 결성됐다. 섬유산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때다. 여성 노점상, 가내수공업 노동자 등 그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힘겨워하던 여성들이 SEWA에서 모여 힘을 얻었다.

한목소리로 "우리를 합법화해다오" 이들은 지난 3월16~19일 서울 한국여성개발원과 동대문운동장 열린장터 등에서 열린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 서울대회에 함께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이번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모잠비크·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잠비아·케냐·베냉·페루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10개 나라 15개 단체에서 온 30여명의 노점상과 활동가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제노점상연합(www.streetnet.org.za)은 2002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각국 노점상과 활동가들이 연대해 노점상을 비롯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책을 논의하고 연대를 다지기 위해 발족한 단체로 이번 서울대회가 창립 이후 첫 국제대회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자'라고 여기는 공장 노동자나 사무 노동자, 공무원처럼 '변듯한' 노동자가 아닌 노점상·가내수공업자·행상·가사도우미·짐꾼 등 고용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노점상들의 노동할 권리와 복지를 요구하고, 아동 노동을 없애기 위해 위해 노력하며 노점상 근처에 저렴한 탁아시설 등을

설치할 것,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단속에 맞서며 정부 당국이 노점상들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도록 운동을 벌일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런 사안들을 논의하는 내내 이들은 심각해지는 노점상의 문제 아래에 도사린 저개발국가의 높은 실업률, 세계화 물결 속에서 정리해고와 유연화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에 쫓겨나는 사람들, 농촌 경제의 붕괴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점상연합 초대 의장으로 뽑힌 김흥현 전국노점상연합회 공동의장은 “모든 나라들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임금도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아무리 찾아해매도 취업할 수가 없어 노점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도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들에 불법이란 낙인만 찍을 뿐 이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노점상연합은 한국에 80만~100만명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임금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 등에 종사하다가 노점상이 된 이들의 비중이 37.7%나 된다고 지적했다.

잠비아에서 온 엘비스 키살라(32)는 12년째 잠비아의 제2 도시인 키투웨의 거리에서 바나나를 팔고 있는 노점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취직’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노점상을 하는 내내 단속 때문에 힘들었고, 3번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제일 서럽고 힘들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잠비아에서 시작된 노점상연합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도부와 실무팀을 구성해 노점상들의 상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중앙정부, 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며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내각과 대통령에게 제출돼 검토 중인데 노점상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할 것, 비공식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합법화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인도에서는 법원판결로 권리 찾아 이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점상은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지만, 노점상들이 어떻게 ‘연대’ 하고 정부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화’가 희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노점상을 인정하고 ‘허가제’ 등을 통해 노점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었다.

노총 안에는 17개 노조가 있는데 대부분 공장 노동자가 아닌 미용사, 농민, 노점상 등이다. 오통은 “가나도 198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으면서 심한구조조정이 있었다. 많은 산업이 민영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공식 부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제 전체 노동인구의 80%가 노점상 등 비공식 부문에서 일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총이 이전처럼 공장 노동자에게만 신경쓸 수 없었고, 3~4년 전부터 노점상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5810명의 노점상들이 노조에 가입했으며 도시에서는 노점상들의 지도부를 뽑아 시 당국과도 만나고 큰 시장에서는 노점상 자녀들을 돌보는 유치원과 진료소도 만들었다. 아직 지방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점차 지방으로도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도의 상황은 이들이 꼽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1998년 SEWA가 주도해 인도노점상연합이 구성됐다. 320명의 노점상들이 단속으로 한꺼번에 구속되자 노점상연합이 이들을 지원해 고등법원 판결로 생계형 소규모 노점상이 영업허가와 영업공간을 얻을 권리를 찾았다. 현재는 주정부나 시정부에 요구해 경찰·기업·노점상·상인·정부·소비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노점상에 대한 정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날리 샤 SEWA 부의장은 “노점상은 1천만명의 인도인과 그들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수단이자, 농민과 소비자를 이으며 값싸게 식품 등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당당한 경제 주체”임을 강조했다. 노점상연합과 정부가 합의한 문서에는 노점상을 사회의 한 주체로 존중하고 노점상의 조직과 단결권을 인정하며

강제 철거나 미관을 이유로 한 노점 단속을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의 편의를 짓밟는 것이므로 엄격히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청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노점상, 세입자, 영세상인 등 빈민들이 쫓겨나고 강남·안산 등 곳곳에서 용역깡패까지 동원된 노점 단속이 이뤄지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했다. 팻 혼 세계노점상연합 조직담당은 “서울시 역시 도시 개발을 이유로 외국의 다른 도시에서처럼 일단 노점상을 몰아내고 보자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당장은 노점상들을 내쫓을 수 있을진 몰라도 노점상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몇해가 지나면 예전과 똑같이 될 것이다.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실업자가 노점상되는 세계적 추세 김경립 전국노점상연합 선전1국장은 “최근 실직자와 농민들까지 노점상으로 변신하면서 외환위기 직후보다 노점상들이 더 많아졌고,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다보면 젊은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져 놀라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설 용역들을 동원해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 철거만 하고 있다. 서울시가 말하는 기업형 노점상은 전체의 1~3%뿐이고, 대부분은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노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이 어쩔 수 없는 생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노점상대회가 열리는 동안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9.1%로 치솟았다는 통계가 발표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노점상이 되어 거리로 나올 것이다. 노점상 운동이 어찌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한 흐름이 될 지도 모르는 암울한 현실이다. 그러나 함께 모여 희망을 찾아가는 세계 노점상들의 얼굴에 그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The Bellagio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Street Vendors 노점상의 벨라지오 국제 선언

>> Having regard to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다:

○ that in the fast growing urban sector there is a proliferation of poor hawkers and vendors including those who are children;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난한 행상과 노점상들의 확산된 도시부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 that because of poverty, unemployment and forced migration and immigration, despite the useful service they render to society, they are looked upon as a hindrance to the planned development of cities both by the elite urbanites and the town planners alike;

가난과 실업, 강제 이주, 이민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트 도시 정책자들과 도시 계획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계획에 방해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

○ that hawkers and vendors are subjected to constant mental and physical torture by the local officials and are harassed in many other ways which at times leads to riotous situations, loss of property rights, or monetary loss;

그 행상들과 노점상들은 지역 정책입안자들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적절한 권리와 재산까지 침해당하는 식으로 탄압을 당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

○ that there is hardly any publicity consistent with the needs of street vendors throughout the world,

전세계를 통틀어 노점상들이 필요로 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

>> We urge governments to form a National Policy for hawkers and vendors by making them a part of the broader structural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ir standards of living, by having regard to the following: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상들과 노점상들의 삶의 수준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대하고 건설적 정책 생산의 대상으로 행상들과 노점상들을 포함시켜 국가 정책을 형성하도록 정부들에 항의한다.

○ give vendors legal status by issuing licenses, enacting laws and providing appropriate hawking zones in urban plans,

자격증, 법률제정, 도시계획에 의한 행상구역 제정 등을 통해 상인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 provide legal access to the use of appropriate and available space in urban areas,

도시 영역 중에서 적당한, 이용 가능한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라.

○ protect and expand vendors' existing livelihood,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라.

○ make street vendors a special component of the plans for urban development by treating them as an integral part of the urban distribution system,

노점상을 도시분배 시스템의 긍정적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에 의한 도시 개발 계획의 특별한 구성요소로 삼아라.

○ issue guidelines for supportive services at local levels, 합법적 수준에서 지원 서비스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하라

○ enforce regulations and promote self-governance, 법규를 제정하고 자율질서를 증진시켜라.

○ set up appropriate, participatory, non-formal mechanisms with representation by street vendors and hawkers, NGOs, local authorities, the police and others,

노점상과 행상, NGO, 관할지자체, 경찰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여 적절하고 참가가능하며 공식부문에 국한되지 않은 메커니즘을 세워라.

○ provide street vendors with relief measures in situations of disasters and natural calamities,

재난과 자연 참사의 상황에 노점상들의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노점상연합 NFSVK: National Federation of Street Vendors of Korea

서울 종로구 송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Tel : 02)2232-0684~6, Fax : 02)2232-0687

www.nojum.org takebest@hanmail.net, livre9@hotmail.com

국제노점상연합 StreetNet International

Postal Address: P.O.Box 61139, Bishopsgate, Durban 4008, South Africa

Tel : +27 31 307 4038, Fax : +27 31 306 7490

www.streetnet.org.za stnet@iafrica.com